

“이진우, ‘국회 본청 들어가 의원 끌어내라’ 지시”

현재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조성현 “그렇게 임무 부여 받아”
김봉식 “김용현이 장소 문건 건네”
조태용, 계엄 무렵 김여사와 문자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고 문자 이같이 답했다.

조 단장은 “(12월 4일 오전) 00시40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 받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가 변경됐다”고 답했



조태용(오른쪽)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진술)이 ‘본청 안 들어가라, 의원을 끌어내라’ 이었는지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안으로 들어가 의원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현재가 직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한 계엄군 지휘관이다. 이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 시간대별 장소가 적힌 문건을 전달받

았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A4용지에 적힌 ‘2200 국회’에 대해 “경찰이 22시까지 국회로 출동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정장은 “(해당 문건을 주면서)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 지금 보시는 계엄군 출동 장소로 인식이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전정장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당일 밤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했다. 조 원장은 다만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잡으러 다닐 권한이 없고 지원한다면 (1차장이 아닌) 2차장 산하가 좀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홍 전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

다며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메모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12월4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에 가필을 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라며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설명한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무렵,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나왔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낸다”며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당시 행방불명된 경기도민 정기영씨의 위령비 앞에서 참배하고 있다. 뉴스

김동연 “정권 교체론 부족… 제7공화국 출범을”

국립 5·18민주묘지 등 참배 “임기 단축·개헌 임무 완수”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를 찾아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와 망월동 5·18 구묘역을 참배한 뒤 취재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87체제(1987년 9차 개헌)는 이제 시효를 다했다. 계엄·내란사태까지 벌어지는 지경에 이른 만큼 대한민국은 제7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세력과 깨어있는 시민의 힘까지 합해 제7공화국을 만드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을 수 있는 개헌, 계엄의 요건을 구체화해 다시는 이와같은 일을 반복할 수 없도록 하는 개헌, 45년 전 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킨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경제 개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분권형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다음 대선은 차기 총선과 주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2년 단축하고 3년 임기로서 개헌을 확실하게 추

진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을 막기 위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가진 시민들이 등장했듯, 이제는 빛의 혁명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다같이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빛고를 광주에서 빛의 혁명을 이끌어내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5·18 시민군 대변인’ 고(故) 윤상원 열사의 묘소를 시작으로 경기도 출신 5·18 희생자 또는 행방불명자, 고 이한열 열사 등의 묘소 등을 찾아 참배했다. 5·18 구묘역의 ‘전두환비석’도 봤다.

참배에 앞서서는 방명록에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라고 작성했다.

참배를 마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경기도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이후에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을 면담한다.

또 무등산에 있는 ‘노무현 길’ 1km 구간을 걸으면서 노 전 대통령의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떠올리며 광주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광주 방문 둘째날인 14일에는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이어 육현진 시문 가톨릭 광주대학교 교주교와의 면담, 소심당(素心堂) ‘조아라 기념관’을 찾아 조 선생을 추모하는 일정도 소화한다. 정성현 기자

지역경제 살리기 전남일보 연중 캠페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자리를 만듭니다